

21세기 동북아 해양전략 - 미·중·일·러를 중심으로 -

박 남 태, 정 재 호, 오 순 근, 임 경 한*

I. 시작하는 글

II. 미국의 해양전략

1. 미국의 해양력 변천사
2. 21세기 미국의 해양전략

III. 중국의 해양전략

1. 중국의 해양력 변천사
2. 21세기 중국의 해양전략

IV. 일본의 해양전략

1. 일본의 해양력 변천사
2. 21세기 일본의 해양전략

V. 러시아의 해양전략

1. 러시아의 해양력 변천사
2. 21세기 러시아의 해양전략

VI. 맺는 글

* 박남태(해군중령, 미 텍사스A&M대학 국제관계학 박사), 정재호(해군중령,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 국제관계학 석·박사), 오순근(해군중령, 미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 국제정치학 박사), 임경한(해군소령, 서울대학교 국제학 박사).

I. 시작하는 글

유사 이래 한반도와 우리 민족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로 일컬어지는 주변국들과 갈등과 협력의 역사를 반복해왔다. 이들은 대부분의 과거에도 여전히 강대국들이었고, 21세기 현재에도 세계 속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들이다. 그리고 이들 주변국들과 우리는 해양을 사이에 두고 있다. 미국과 일본과는 태평양과 동해를, 중국 및 러시아와는 서해, 남해 그리고 동해를 사이에 두고 있다. 우리는 주변국들과 해양에서의 지속적인 무력충돌을 겪어왔고, 지금도 일부 주변국들과 독도, 이어도 등 해양영유권 및 관할권 갈등을 겪고 있다.

과거 몇 가지 전쟁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상황을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16세기 전국을 통일한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바다를 건너와 조선을 침략했다. 왜군에 의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7년 동안 조선 백성들은 유린되었으며, 국토는 거의 초토화 되었다. 근세로 넘어와서는 1895년 청일전쟁도 힘없고 작은 약소국 조선에 대한 이권다툼이었으며, 주요 전쟁터는 조선의 서해였다. 1904년의 러일전쟁 중에는 극동 해양으로 진출하려는 러시아와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일본이 대한해협에서 해전으로 맞붙었다. 이렇듯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한반도 주변의 바다는 강대국들간의 충돌의 무대가 되어 왔다. 그 틈에 낀 한반도는 항상 피해자였으며 전승국의 처분에 몸을 맡겨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이제 한반도가 위치한 동북아시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는 탈냉전 이후 국제정치의 지정학적 무게중심이 유럽 중심에서 아시아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중국의 부상이 현실화되면서 국제정치의 두 강대국이 경쟁하는 주요 무대로서 아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기존 미국의 질서에 새롭게 부상하는 중국이 도전해 오고 있으며, 그 전환의 충돌점이 바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해양이다.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미국은 공해상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에 대한 보장을 주장하는 등 양국 간 해양 갈등이 표면화되는 것이 주요한 예다. 동북아시아 주변 해양이 요동치는 이유이다.

남중국해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다준다. 먼저 국가적 차원으로서 미국은 한국에 남중국해 사태와 관련해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의 입장을 지지해줄 것을 요구했다.¹⁾ 이러한 상황을 비유한 말로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협력한다.) 표현이 생겨났으나, 두 강대국 사이에 낀 한국의 상황을 잘 표현한 말이기도 하다. 불행히도 많은 한국의 선박들이 이러한 긴장의 남중국해를 지금도 조심스럽게 항해하고 있다. 중동에서 들어오는 국가의 동력인 원유 에너지와 한국의 국가 총생산을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출입 물동량들이 바로 그것이다.

최근 일본이나 러시아 또한 가까운 미래에 동북아시아 해양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잠재적 주요 행위자이다. 일본은 지난 4월 ‘新미일방위협력지침’을 발표했다. 잘 알려진 대로 새로운 방위협력지침의 기본 방향은 아시아에서 미국을 지원하기 위한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였다. 즉, 미국은 국방재원의 압박 속에서도 아시아 지역에 더 많은 군사력을 운용하기 위해 일본과의 한층 강화된 안보협력이 필요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군사활동 영역 확대를 위한 미국과의 안보 협력이라는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신(新) 미일방위협력지침과 일본의 국내법(안보법제)의 연계를 위해서 법안의 국회 인준을 처리했다.²⁾ 한편 러시아는 푸틴의 재집권 이후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를 서서히 극복하면서 강대국으로서의 부활을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7월 발표한 신(新) 해양독트린을 통해 북극에서 남극을 아우르는 해양 정책을 발표했는데 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과의 우호 관계 발전을 주요 이슈로 다루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에 맞서는 대응 전략으로 역내 해양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기와 같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해양안보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동북아 주변국들이 해양 역사와 이슈들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서 이 글이 작성되었다. 미중간의 남중국해 갈등과 일본 및 러시아의 해양 진출 가속화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양 이슈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의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한 결과이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분명하다. 이 글의 모태(母胎)로서 『21세기 동북아 해양전략: 갈등과 협력의 딜레마』라는 책에서 제시한 우리 주변국(미·중·일·러)의 해양전략 중 주요 내용을 압축하고, 최근 이슈에 대한 국가들의 움직임과 대응전략을 상세하게 정리할 것이다.³⁾ 구체적으로

1) 최재혁, “오바마의 요구에도... 청 남중국해, 새로운 입장 안낼 것,” 『조선일보』, 2015. 10. 26.

2) 일본 아베 정부는 안보법제를 중의원 본회의 단독처리(7.16) 이후, 참의원 본회의는 9.19일에 강행 처리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일본 시민단체 및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부는 본 법안을 강행하여 통과시켰다.

3) 현역 해군장교 5명이 공동으로 집필한 책으로 21세기 동북아 주요 국가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

는 이 글을 통해 주변 국가들이 해군력을 강화시켜 온 역사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동북아 주변 해양안보 이슈에 대한 각국들의 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나아가 앞으로 한국 해양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필요가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Ⅱ. 미국의 해양전략

1. 미국의 해양력 변천사

미국의 군사·외교정책에서 군사력은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고려되었고, 그중에서도 해군력은 단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1775년 미 해군이 창설되고 나서 240년이 지난 2015년 현재도 미 해군은 여전히 미국의 군사·외교정책을 지원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오늘날의 미 해군은 언제나 최소한 항공모함 4척, 잠수함 30여 척을 포함하여 세계 어느 해역에서라도 당장 작전이 가능한 수준의 힘을 보유하고 있다. 2015년 현재,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280여 척의 전투함만으로도 여타 경쟁국들을 능가하는 수준인데,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영국 해군의 소위 2국 표준(two power standard) 기준을 적용해볼 때 미 해군력은 이미 중국과 러시아의 해군력을 합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⁴⁾ 여기에다가 미 해군이 세계 곳곳에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해군기지는 미 해군력⁵⁾의 실제적인 운용 능력을 보장하기 때문에 역사상 그 어느 국가도 누리지

아, 그리고 한국의 해양전략이 역사적 변천 과정에 따라 정리되어 있다.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전문 학술지인 Strategy 21에 소개하면서 한반도 주변 국가의 해양전략을 재강조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임경한·오순근·박남태·정재호·김기주, 『21세기 동북아 해양전략: 갈등과 협력의 딜레마』 (서울: 북코리아, 2015).

- 4) 2국 표준이라는 것은 자국을 제외하고 차순위 2개 국가의 해군력을 합친 정도와 맞먹는 수준의 해군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제프리 톨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주요 전투함을 비교했을 때(전투함의 질적인 측면은 제외하고 수적인 측면만 고려) 미 해군의 전투력은 중국과 러시아의 전투력을 합친 것을 조금 능가하는 수준이지만, 미 해군이 보유한 함정의 전체 톤수에서는 미 해군이 이미 13국 표준의 수준에 있다. 최중호·임경한 공역, 제프리 톨 저, 『아시아의 해군력 팽창: 군비경쟁의 서막인가?』 (서울: 해양전략연구소, 2013), pp.241-242.
- 5) 이 글에서는 '해군력'과 '해양력'이 혼재되어 사용된다. 해군에 특화된 내용을 설명할 때는 해군력이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지만,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에는 해양력을 사용한다. 정확한 의미를 구분하면 해양력이 해군력을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여기에서는 용어의 구분보다는 군사

못한 힘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겠다.

1775년 10월 13일 창설된 미 해군은 1823년 미국의 제임스 먼로(James Monroe) 대통령의 독트린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해군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실질적으로는 18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적인 수준의 해군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그 바탕에는 강력한 해군력 확보를 통해 영토 밖 해상에서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자각이 있었다. 1898년 미국은 스페인과의 전쟁을 통해 필리핀, 쿠바, 푸에르토리코, 괌 등 새로운 식민지들을 차례로 손에 넣게 되었고, 1899년에는 하와이제도와 동부 사모아, 웨이크 섬까지 점령했다. 미국은 이 시기부터 서반구(western hemisphere)에서 국가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던 것이다.

20세기 두 번에 걸쳐 발발한 세계대전을 통해 미국은 세계의 문제에 관여했고, 결과적으로 역사상 그 어느 국가와도 비교하기 힘든 수준의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전쟁이 끝나고 이제 미 해군에 대항할만한 국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전쟁 이후 미국이 방대한 수준의 해군력을 왜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만들었다. 장차 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대륙에 있었고, 어떤 공격적인 함대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유럽의 강대국들이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당분간 잠재적 경쟁 상대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서양과 태평양이라는 두 대양 모두에서 주도권을 잡고자 노력했고, 이는 곧 이 지역에서 미 해군이 해양통제권을 확보하고, 그 영역을 확대해나간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조는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2001년에 발생한 9·11 테러 사건은 미국으로 하여금 전례 없는 안보환경에 놓이게 만들었다. 그동안 특정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준비해온 미국으로서는 새로운 적에 대한 대응 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했다.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대테러 전쟁을 수행해야 했던 미국은 단독작전이 아닌 합동작전 및 동맹·우방국과의 연합작전을 중시했다. 물론 미국 주도의 전 지구적 대테러 전쟁에 있어 해군력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조금 달라진 움직임이 있었다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재해·재난 사고 등에 대처하고, 해적행위 및 해상테러 등 해양

력이 갖는 의미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 해군력을 해양력과 거의 동일시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에서의 범죄행위에 대응하며, 불법 이민·난민이나 해양오염 등 각종 불법행위에 주도적으로 맞서는 미 해군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해양전략은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전 세계의 안보가 점점 더 밀접하게 상호 연결되는 안보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해양에서의 안보를 위해 미국이 우방 및 동맹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이는 멀린 전(前) 미 해군 참모총장이 주장한 1,000척 해군(A Thousand Ship Navy)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미 해군이 협력적인 해군 전략을 강조하는 이면에는 냉전 이후 각종 비군사적 위협 발생에 따른 인도주의 해군 작전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이 전 세계의 안정적인 안보환경을 주도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2. 21세기 미국의 해양전략⁶⁾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미 해군은 비전통 해양안보 위협에까지 대응하려는 노력을 집중했다. 또한 수면 밑에서 부상하고 있던 중국이라는 잠재적 위협 국가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미국에게 새로운 군사전략의 변화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추진한 해양전략의 중심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배치한 해군 함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재배치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미국은 자연스럽게 대서양과 태평양의 함정 배치 비율을 조절하기 시작했고,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아시아 중시 전략에 따른 해양전략을 서둘러 진행했던 것이다. 21세기 미국은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해양전략의 무게중심을 완연하게 유럽에서 아시아로 옮겨왔다고 할 수 있다.

미 해군은 해병대 및 해안경비대와 함께 2015년 3월 21세기 협력 전략을 개정하여 발표했다.⁷⁾ 위 전략서는 2007년의 발표한 내용을 보완한 것인데,

6) 여기에서는 미국의 전 지구적인 해양전략 내용 중에서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에 따른 해양전략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7) 2015년 미국은 공식 전략보고서를 통해 인도를 포함하여 아시아·태평양 해역에서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미국은 전 세계 모든 전장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강조하면서 동맹 및 우방국들과의 연합작전을 중요시한다. 이들 국가들과 함께 전 지구적 관여(engaging partners across the globe)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US Navy, US Marine Corps, US Coast Guard, *A Cooperative Strategy for 21st Century Seapower: Forward, Engaged, Ready* (Washington, D. C.: Department of the Navy, 2015).

2007년의 전략서에서 강조한 내용과 같이 전 세계 전방위적인 해양력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2015년 협력 전략서에서 주목해야 하는 분야는 미국이 2015년 글로벌 안보환경의 변화에서 인도-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다. 2020년 기준으로 인도-아시아-태평양 해역에 최신 전력 위주로 60% 수준을 배치함으로써 아시아 중시 전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미국은 특히 중국의 해양전략을 주시하면서 미해군의 전방현시(Forward Naval Presence)를 통한 역할과 그 준비를 강조했다. 전략서에서 미국은 중국을 기회(opportunities)이자 도전(challenges)으로 명시했다.⁸⁾ 따라서 미국은 중국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채택한 것이다.

미국이 아시아 중시 전략을 채택하게 된 동인(動因)을 경제와 안보 면에서 비교적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먼저, 경제적인 측면을 보면 국제사회에서 아시아의 위상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총생산의 절반 이상을 생산해내며 세계 경제의 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 아시아는 미국의 경기 회복과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2020년경 전 세계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경제적인 비율은 40%를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아시아는 국내 총생산 기준으로 2위 중국, 3위 일본, 12위 호주 그리고 15위 한국 등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다.⁹⁾ 특히 아시아는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교역량이 거의 2배가 증가할 만큼 급격한 경제성장을 해오고 있다.¹⁰⁾ 또한 2011년 한 해 동안 미국의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량은 미국 전체 수출량의 60%를 차지했는데, 이는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 환태평양 파트너십(TPP) 체결에 따라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경제적 이해가 한층 더 증가할 것이다. 환태평양 파트너십은 미국을 비롯해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주로 아시아에 위치하거나 아시아를 경유하는 교역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국가들이 대부분 참가하고 있다. 환태평양 파트너십 참가국들의 인구는 약 8억 명에 달하고, 미국은 이들 국가들과 활발한 무역 활동을

8) 위의 책, pp.3-9.

9) World Bank, "Gross Domestic Product 2012," <http://databank.worldbank.org/data/download/GDP.pdf>(검색일: 2015. 6. 4).

10) Mark E Manyin, et al, "Pivot to the Pacific? The Obama Administration's 'Rebalancing' Toward Asia," CRS Report for Congress, 2012, p.26, <http://fas.org/sgp/crs/natsec/R42448.pdf>(검색일: 2015. 7. 9).

펼치고 있다. 미국은 환태평양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향후 아시아 지역을 포괄적인 자유무역지대로 확대·발전시키고자 하는 21세기 신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¹¹⁾ 미국의 입장에서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적인 유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이유이다.

사활적인 국가이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안보적 요인은 경제적 요인보다 더욱 중요하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아시아 국가들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175% 수준으로 다른 지역의 증가율을 압도하고 있다.¹²⁾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아시아가 국제안보질서의 핵심 지역으로 등장한 것은 미국이 아시아 중시 전략을 채택하게 된 또 다른 이유이다. 특히 중국의 군사력이 급격하게 증강된 것이 아시아로 미국의 발걸음을 재촉한 직접적인 원인이다. 중국은 반접근/지역거부(A2AD: Anti-Access/Area-Denial)라고 평가받는 군사전략 목표 아래 비약적으로 증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10년 전에 비해 약 3배 이상의 국방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또한 군사적 자신감은 중국으로 하여금 센카쿠(다오위다오) 열도, 난사군도(Spratly Islands) 등 동·남중국해 영토 분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힘이 되고 있다. 특히 양안 문제는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지표로서 활용이 될 만한 요소인데, 중국은 대만에 비해 압도적인 해군력을 보유함으로써 미국을 자극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 해양에서의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무역과 항해를 위한 지역의 해상교통로(SLOCs)를 보장하는 것 역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인도양과 남중국해를 지나는 해상교역량이 세계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 지역 해상에서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는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익이 걸린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 갈등을 겪는 역내 미국의 동맹국 및 안보협력국의 러브콜이 이어짐에 따라 미국은 역내 안보질서 확립과 위상 제고를 위해 아시아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은 동맹국 및 안보협력국의 요구를 충족시켜줌으로써 정치·경제를 망라한 미국의 국가이익을 달성하고자 한다. 오바마 미 대통령이 “21세기에 미국은 아시아에 올인(all-in)할 것”이라고

11) 최원기, “미국의 환태평양 파트너십(TPP) 추진 전략: 추진 배경 및 향후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no. 2010-24, 2010.

12) SIPRI(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Trends in World Military Expenditure, 2012,” p.5, <http://books.sipri.org/files/FS/SIPRIES1304.pdf>(검색일: 2015. 7. 9).

천명한 이후 미국은 적극적으로 아시아로 향하고 있다. 2012년 1월에 발표한 미국의 신(新) 국방전략지침(new defense strategic guidance)에서는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을 지원하는 미군의 임무를 잘 반영하고 있다.¹³⁾ 비록 신국방 전략지침의 배경이 국방예산을 효과적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없다는 데 있었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국방예산이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국가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 훈련과 군사력 준비를 가장 완벽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임을 거듭해서 강조했다.¹⁴⁾ 이는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군사력의 역할과 운용을 예고하는 것이다.

최근 남중국해를 배경으로 한 미국의 움직임은 보면 중국과의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모습을 잘 알 수 있다. 남중국해는 중국에게 있어 세계로 나아가는 길목이다. 1860년대 이후 서양으로부터의 100년의 굴욕을 끝낸 중국의 입장에서 전 세계에 우뚝 서는 첫 걸음을 남중국해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남중국해 주요 섬들은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고 2013년부터 남중국해에 위치한 주요 섬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군사용 활주로와 군항 등을 포함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수비 환초와 미스치프 환초를 포함한 총 7개 섬으로 확대된 것으로 위성을 통해 포착되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강력한 해군력을 통해 미국의 접근을 원거리에서 차단하는 전략을 펼치는 형국이다.

이러한 중국의 행보에 대해 미국은 역내 주요 동맹국을 물론이며 해양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관계 국가들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7월 호주와의 정례 훈련인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에 일본을 참가시켰으며, 9월에는 필리핀, 일본 등과 함께 분쟁 지역 인근에서 합동 상륙작전을 실시하는 등 무력시위를 벌였다.¹⁵⁾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등과도 군사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관련국 간 마찰 확대 등에 대한 준비를 내세우며 해병대 전체 병력의 15% 가량을 하와이와 태평양 일원에 전진 배치할 계획을 밝혔다. 표면적으로 남중국

13) U. S. Department of Defense, "Sustaining U. 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 http://defense.gov/news/Defense_Strategic_Guidance.pdf(검색일: 2015. 5. 3).

14) Donna Miles, "Strategy Guidance Underscores Asia-Pacific Region," American Forces Press Service, 2012; Leon E. Panetta, "Defense Strategic Guidance Briefing from the Pentagon," <http://defense.gov/landing/comment.aspx>(검색일: 2015. 6. 8).

15) 김동진, "中 맞서...美·日·濠 군사 협력 본격화," 「세계일보」, 2015. 7. 13; 윤정호, "美·日 동맹으로 동쪽 海路 막힌 中, 인공섬 만들어 남쪽으로 우회," 「조선일보」, 2015. 10. 20.

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우발적 충돌상황을 사전에 준비하는 양상이다.

남중국해 자체의 경제적·자원적 가치를 뒤로 하고서라도 미국이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이유는 분명하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남중국해 문제 해결은 앞으로 미국이 아시아 중시 전략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열쇠이다. 미국은 이른바 항행의 자유를 전면에 내세우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공개적으로 인공섬 해역으로 군함을 진입시켜 무력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 10월 27일 미 해군 이지스구축함 라센함(DDG-82, USS Lassen)이 남중국해 인공섬 12해리 안에 처음으로 항해한 것이다. 또한 애슈턴 카터 장관은 “우리는 아시아태평양 재균형의 한 부분으로서 (항행의 자유에 대한) 약속을 해왔으며 이것은 미국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¹⁶⁾ 특히 미국은 앞으로의 방향성을 알리는 결정적인 카드로 군함을 이용한 항해를 시도했다. 지난 2012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이 현실화되는 순간이었다. 앞으로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체결에 따른 경제 문제와 연관 지어 역내에서 안보적 우위를 달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해양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Ⅲ. 중국의 해양전략

1. 중국의 해양력 변천사

중국의 현재를 알기 위해서는 과거로 오랜 시간을 거슬러 가야 한다. 송나라는 1044년 세계 최초로 항해용 나침반을 개발하여 사용한 나라였다. 일부 기록에 의하면 1274년 당시 송은 무려 1만 3,500여 척에 이르는 해군함정을 배치하고 독립군중으로 상비해군을 갖춘 세계 최초의 국가였다.¹⁷⁾ 원나라는 북

16) 이승헌, “美, 항모 투입 움직임... 中군부 “방공구역 선포” 강경론,” 『동아일보』, 2015. 10. 29.

17) 중국의 대륙기질적 성격과 지도층의 해양인식 결핍을 고려할 때 송나라(960~1279)를 대항해시대 서유럽의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등과 같은 해양국가라고 부르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송나라(특히 남송) 시기의 해양기술적 발전과 해군력은 그 당시 세계 다른 국가들에 비교해서 매우 주목할 수준이었다.

방 유목민족이었던 몽골제국의 나라로, 해양활동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큰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송나라에 이어 대규모 해군 전력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원나라가 베트남, 자바, 일본 등을 침략하기 위해 파견한 대규모 원정함대의 규모를 통해 알 수 있다.¹⁸⁾ 명나라 영락제에 이르러서는 이슬람계 태감출신인 정허(1371~1435)를 필두로 한 원정함대를 조직하게 된다. 정허함대는 해외식민지 확보와 조공 강요를 목적으로 약 30년(1405~1433) 동안 인도양 방향으로 총 7차례의 대원정을 떠난다. 정허의 원정함대는 당시 아프리카의 모가디슈와 걸프 만의 호르무즈 해안까지 진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명나라 시기 정화 함대의 원정은 유럽의 대항해시대보다 70년이나 앞선 대원정이었다.

송나라와 원나라, 명나라에 이르기까지 중국인의 해양 과학기술과 해군력은 분명히 당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수했고 규모가 컸지만 중국대륙을 위협하는 세력은 대부분 서북방의 내륙지역에서 비롯되었고, 그동안 중국의 어떤 왕조도 해상으로부터의 침략으로 인해 몰락한 경우는 없었다. 즉,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는 결정적인 전쟁들은 항상 지상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당시 중국의 해군력은 강했지만, 이후 서구 국가들 같이 국가의 생존에 있어 해군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¹⁹⁾ 궁극적으로 명나라 영락제 이후 정허함대 폐기를 계기로 명나라는 해양강국으로 성장할 모멘텀을 잃게 된다. 반면 16세기 대항해시대를 맞아 서구 열강들은 본격적으로 해군력을 기르기 시작하고, 결국 그러한 서구 열강들에 의해 중국은 19세기 중반 연이은 아편전쟁의 패배와 함께 반식민지화의 길을 걷게 된다.

아편전쟁 이후 청나라는 서방의 개방정책 요구에 따라 최초로 서양식 해군력 건설을 추진하게 되고, 그 결과 1871년 북양함대가 탄생하게 된다. 1890년에 이르러서는 북양함대가 사실상 청조 해군 그 자체가 되었다. 북양대신 리홍장의 노력으로 1894년 청일전쟁 당시 북양함대는 함정 78척(총 배수량 8만 3,900톤 규모)을 보유한 극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해군함대가 되었다. 청일전

18) 당시 일본 원정에 참여한 원나라와 고려의 전선 수는 1274년 1차 원정에 약 900여 척(병력 약 23만여 명), 남송멸망 후 1281년 2차 원정 때는 약 4,400여 척(병력 약 10만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단순히 원정대 규모로만 본다면 당시 그 어떤 국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전력이다. 그러나 이 두 차례의 일본 원정은 태풍과 일본의 완강한 방어로 인해 막심한 피해를 입고 실패하고 만다.

19) Bernard D. Cole, "The History of the Twenty-First-Century Chinese Navy," *Naval War College Review*, Summer 2014, Vol. 67, No. 3, p.46.

쟁의 분수령은 1894년 9월 17일 황해(압록강)해전에서 북양함대와 일본 연합함대의 결전이었다. 청나라 북양함대는 2척의 전함, 10척의 순양함, 2척의 어뢰정 등 강력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첫 실전이던 황해해전에서 일본군 연합함대에 대패하여 궤멸하고 만다.

당시 청나라 북양함대의 황해해전 패전의 주원인은 인적 측면에 있다는 점에서 현대의 해군력 운용에도 큰 시사점을 준다. 당시 리홍장은 짧은 기간 동안 전력 면에서는 극동아시아 최강의 함대를 건설하였으나, 근본적으로 함대를 운용하는 인적자원 측면에는 그만큼 투자하지 못했다. 즉 영국과 독일로부터 당대 최신에 근대식 해군함정들을 도입했으나, 이러한 함정들을 운용할 수 있는 기술력과 전술적 능력은 쉽게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특히 당시 북양함대에는 지휘통제, 교육훈련, 군수보급, 정비지원 등을 총괄할 수 있는 효과적인 행정체계가 부재했다. 이는 근본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대륙국가 중심의 중국 국가지도자들의 해양인식 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청일전쟁 이후 현대 중국 해양전략의 시작은 공산주의 중국이 건국된 1949년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당시 대만의 국민당 정부는 1949년 6월부터 대륙 경제 파괴를 목적으로 연해지역에 대한 해상봉쇄를 실시한다. 공산당 치하의 중국대륙은 길고 취약한 해안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대만의 해상봉쇄는 중국의 연약한 대륙경제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당시 마오쩌둥의 해양 인식은 대만 해방작전, 국부군의 해상봉쇄, 해군력 미보유에 따른 국부군의 대만 도주 시 추적 불가 경험 등을 통해 해안방어 수준의 해군력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정도였다. 이에 따라 마오쩌둥은 인민전쟁 전략을 바탕으로 연안방어 임무에 치중한 해상인민전쟁론을 발전시키고자 했다. 잠수함과 고속정 위주의 해상전력으로 섬과 어선군 사이에 함정을 매복시킨 뒤 야간 기습공격으로 적을 격퇴하는 전략이다. 기본적으로 지상배치 전력을 중심으로 연안방어에 집중하고, 해군은 경쾌(고속)형함정으로 제한적인 해상 게릴라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는 것이다.

인민해방군 해군(PLAN) 창설 이후 1950년대 중국의 해군력 건설은 당시 공산주의 강대국이었던 소련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초창기 대부분의 함정들은 소련의 지원을 통해 건조되었으며, 이를 위해 중국 해군의 많은 인원들이 소련에 유학했다. 중국 해군의 소련 해군 따라 배우기는 1960년대 중소이념분쟁으로 양국이 갈라선 이후에도 197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었다. 당시 중국 해군은 고르시코프(1910~1988)를 중심으로 한 소련의 소장파 전략에 영향을 받

아 잠수함 중심의 방어적 해군력 건설에 치중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1960년대는 중국을 둘러싼 대부분의 안보위협이 지상 국경지대에서 발생했고, 이에 따라 중국 해군의 근대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1970년대 이후 개혁·개방 시기는 중국의 경제발전뿐 아니라 해양전략에도 심대한 변화가 시작된 시기였다. 덩샤오핑(鄧小平)의 국가전략·정책의 변경과 그에 따른 군사전략의 변화로 인해 중국 해군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처음으로 기존의 소극적 해양전략을 탈피하게 된다. 기존의 방어적 해양전략 개념에 추가하여 세력투사, 현시, 전략적 억제 같은 적극적·공세적 요소들을 포함시키게 된 것이다.

중국 해군이 1980년대에 이르러 현대적인 해양전략 개념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계기는 중국 해군에 류화칭이라는 인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²⁰⁾ 덩샤오핑의 신임과 지지를 받은 류화칭 제독은 중국의 고르시코프르 불리며 현대 중국해군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인물이다. 그는 앞으로 중국의 국가발전에 있어 해양이익이 얼마나 중요하며, 이를 보호하는 것이 해군의 주임무라는 것을 덩샤오핑을 포함한 중국 고위층에게 지속적으로 인식시켜주었다. 류화칭 제독은 1980년대 초 연안방어 전력 수준의 중국 해군을 개혁하여, 제1도련과 제2도련 개념을 바탕으로 한 단계별 해양전략 발전과 해군력 건설계획을 수립했다. 류화칭은 중국해군 창설 후 30년간 이어져온 연안방어 중심의 소극적 해양전략을 근해 적극방어전략으로 발전시켜 이후 중국 해군이 21세기 대양해군을 지향하는 해군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한편 1990년대에 이르러 장쩌민은 걸프전(1991년) 시 미국의 첨단무기체계들을 목격하고 중국의 군사전략 목표를 「첨단 조건하 국지전 승리」로 제시한다. 그는 과학기술을 가미한 훈련, 즉 과기연병(科技鍊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첨단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해·공군 중시정책을 지시한다. 장쩌민 시대의 중국 지도자들은 중국의 국가발전에 있어 해양력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되고, 과거 15세기 명나라가 누렸던 강력한 해양력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국가적 일체감을 형성하게 된다.

20) 류화칭 제독은 1954~58년 소련 유학 후 1960년 북해함대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1960~70년대에는 전투함 설계· 건조 및 전략무기 연구개발 등 주로 국방과학 분야에 근무하였다. 1982~1988년 해군사령원(우리의 해군참모총장에 해당)으로 재직하면서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역임했다. 당시 류화칭 제독은 제1/2 도련선 개념 정립과 단계별 해군력 증강 등 중국 해군의 현대화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류화칭 제독은 해군발전과 국가전략과의 관계를 정립하였고, 해양권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현대화된 해양전략과 해군교리 개념을 정립하였고, 중국 해군의 대양해군 건설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그는 1980년대부터 항공모함을 획득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중국 해군이 장거리 투사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21세기 중국의 해양전략

최근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대항하여 중국은 육상과 해상의 실크로드를 건설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 발표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 Infra Investment Bank) 창설 등 미국과 아시아 주도권에 대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또한 중국은 경제적 국력 신장에 부합한 군사력의 증강을 추구하며, 특히 동아시아에서의 지역패권 확보와 동·남중국해에서 해양 영향권 확대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맞서 현 패권국가인 미국은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으로 인한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 등 미일동맹을 주축으로 중국의 국력이 해양으로 팽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있다. 이렇듯 21세기 두 강대국 간의 군사적 충돌은 동아시아 해양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²¹⁾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인식은 덩샤오핑과 장쩌민 때부터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후진타오 시대에 이르러서는 해양자원과 해양경제, 해양권익 등 종합적인 국력배양 차원에서 해양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후진타오는 2009년 해군 창설 60주년 연설에서 “근해 해군에서 벗어나 대양해군으로 거듭나자.”고 언급한 바 있고, 이에 중국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중국 해군은 원해방위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 18차 당대회에서 후진타오는 해양강국 건설을 중국공산당의 공식목표로 정하였고, 2013년 취임한 시진핑 총서기는 2013년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해양권리와 이익 보호 의지를 재강조하면서 해양개발과 관리에 관한 지식을 증진시키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한편 중국의 해양영유권 수호와 관련하여 시진핑은 “중국은 평화적 발전을 추구하나 국가 핵심이익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나라도 우리가 핵심이익을 놓고 거래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해양강국을 지향하는 중국의 해양정책은 지정학적 측면에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해양굴기를 위한 서태평양으로의 진출이며, 다른 하나는 인도양을 중심으로 한 해외 원양기지 건설이다. 이에 따라 서태평양

21) 정철호, “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 해양전략과 한국의 해양안보: 미중간의 남중국해 해양 통제권 경쟁과 갈등의 영향,” 『세종정책연구』, no. 2012-8, 2012.

쪽으로는 도련선 전략이, 인도양 방향으로서는 진주목걸이 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해양 소프트파워(maritime soft-power) 시현도 중국 지도자들의 중요한 국가전략 중 하나이다.²²⁾ 중국의 소프트파워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2004년 12월 동남아 쓰나미 자연재난 시 미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의 인도주의적 해상 재난구조 활동과 이를 통한 소프트파워의 우월성을 목격한 이후 더욱 강화되었다. 중국해군은 2008년 12월 이후 첨단 구축함과 호위함, 군수지원함으로 구성된 해군 기동부대를 인도양 아덴만에 파병하여 해적퇴치 작전에 참가시킴으로써, 인도양과 동아시아 지역에 중국해군이 군사적 위협이 아니라는 점을 과시하고 있다.²³⁾

21세기 중국 해군의 해양전략은 기본적으로 1980년대 덩샤오핑과 류화칭 제독이 제시한 ‘근해 적극방어 전략’의 큰 틀 안에서 발전하고 있다. 최근 일각에서는 중국의 군사전략을 A2/AD전략으로 부르기도 한다.²⁴⁾ 반접근(A2: Anti-Access)은 서태평양 지역에 위치한 대규모 미 전진기지에서부터 미군 전력의 대중 작전수행을 차단하는 전략개념이다. 지역거부(AD: Area Denial) 개념의 핵심은 남·동중국해와 서해에서 작전 중인 미 해상전력의 자유로운 군사행동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바라보는 중국의 A2/AD전략은 미국과의 정면대결을 회피하고 취약점을 기습공격하는 비대칭전략으로, 제2차 세계대전시 독일과 냉전시기 소련의 대미 잠수함작전과 유사한 성격의 전략이다. 이는 미국의 대중 군사력 사용에 대해 고비용과 혈투를 유발시켜 군사력 사용의지를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군사전략·전술적 차원에서는 미 군사력의 분쟁지역 접근을 차단/지연시키고 최대한 원거리에서 작전을 수행토록 강요할 수 있게 된다. 궁극적으로 오키나와, 괌 등 역내 미군기지 사용을 거부함으로써 미국의 지휘통제, 조기경보, 증원 및 군사지원에 지장을 초래하여 작전능력을 감소시키는 전략이다.²⁵⁾

22) 최근 중국 해군의 해양 소프트파워 시현과 관련해서는 요시하라, 흠스의 『태평양의 붉은 별』 제6장을 참고. 윤석준 역, 도시 요시하라·제임스 흠스 공저, 『태평양의 붉은 별: 중국의 부상과 미국 해양전략에 대한 도전』(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3).

23) 현 중국 해군사령원 우성리 제독은 중국 해군의 아덴 만 해적퇴치작전 참가 및 성과는 “강력한 인민해군의 정치적·군사적 역할을 완벽히 수행한 것이며, 중국이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성숙한 문화적 역할을 수행한 사례”라고 강조한 바 있다.

24) 여기서 반접근/지역거부(Anti-Access/Area-Denial)는 미국의 관점에서 중국의 대미 군사전략을 평가하여 부르는 용어이며, 중국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군사전략이나 해양전략 명칭은 아니다.

2015년 기준 중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다. IISS에서 발행하는 『세계의 군사력(Military Balance)』과 IHS에서 발행하는 『제인연감(Jane's Fighting Ships)』에 의하면 2015년 현재 중국은 총 900여 척의 함정을 보유 중이며, 주요 전력으로 항공모함 1척, 주력전투함 80여척, 전략핵잠수함 4척, 공격잠수함(핵추진잠수함 포함) 70여척, 상륙함 240여 척 등을 보유 중이다.²⁶⁾ 중국의 항공모함 보유는 중국의 강대국화 욕구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지정학적 외연의 확장과 군사과학 기술적 발전 측면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기존의 구축함과 호위함 등 수상전투함들을 원해작전이 가능하도록 더욱 첨단화·대형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4함대는 남중국해 하이난도(海南島) 싼야(山亞)기지에 창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하이난도 신해군기지 건설이 기본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보이며 신 기지에는 다수의 전략핵잠수함, 최신 수상전투함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과 지하시설들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이난도는 중국의 핵심이익 해상교통로에 대한 직접적 접근을 제공할 뿐 아니라 남중국해 해상으로 잠수함을 비밀리에 전개하기에 용이한 지·전략적 위치에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의 하이난도 싼야기지는 우리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 전략해군기지 건설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21세기 중국 지도자들의 해양강국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해상교통로 보호, 해외유전 개발, 해외기지 구축 등의 공세적 해양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은 G2시대를 맞아 강대국 위상에 부합하는 대양해군 건설과 원해를 지향하는 적극방어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에 따라 서태평양에서 미국과의 해양패권 경쟁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양안 문제,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난사군도, 시사군도 등 주변국들과의 무력분쟁 가능성도 더욱 증대할 것이다.

2015년 5월 26일 중국 국방부는 ‘중국의 군사전략(中國의 軍事戰略)’이라는 제목으로 2015년도 국방백서를 공개했다. 이번 국방백서는 중국이 해양권의

25) 미국을 겨냥한 중국해군의 대표적 비대칭전력으로는 대위성무기체계(ASAT), 전략핵잠수함, 공격핵잠수함, 다수의 유도탄고속함과 제2포병에서 운용하고 있는 대함탄도미사일(DF-21D)과 대지순항미사일(DH-10) 등이 있다.

26) 참고로 일본에 위치한 미 7함대는 항모(조지 워싱턴) 1척, 주요 수상전투함(순양함, 구축함 등) 10여 척, 공격잠수함 3척, 상륙강습함 6척을 보유하고 있다.

보호와 해양전략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국가적으로는 해양강국 건설을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중국의 해양권익을 지킬 수 있는 강한 해군력의 건설을 추구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해군은 기존의 근해방어 개념에서 벗어나 근해방어와 원해호위를 동시에 수행한다는 개념이다. 집권 3년차를 맞이한 시진핑 주석의 해양강국 건설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²⁷⁾

현시점에서 중국해군의 최대 과제는 제2도련선 내 해상작전 수행을 위한 항모전투단 구축 및 운용일 것이다. 현재 운용중인 랴오닝함의 전력화와 작전경험을 바탕으로 2020년까지 1~2개의 항모전단 창설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항공모함은 중국의 국가 경제력 향상, 과학기술 발전, 강대국으로의 위상 확보를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국가 전략적 수단이다. 따라서 제2도련선 해양통제를 위한 중기 해군력 건설의 최대 목표는 항모기동부대 중심의 입체적 해상작전능력 구축이 될 것이다. 장기에 해당되는 3단계(2021~2050년) 기간 중 중국의 국가 전략적 목표는 대륙국가 탈피로 세계 주요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것이다.

중국 해군은 2020년 이후 중국이 건설한 대양함대가 현재 미 해군과 같이 아시아 지역 및 세계 주요 해로를 항해하는 것을 꿈꾸고 있다. 최근 중국의 남중국해 상 인공섬 건설과 이에 대응한 미 해군 라센함의 12해리 권내 항해 등 공해상 항해의 보장(Freedom of Navigation)을 둘러싼 양국 간 해상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이에 중국은 인근해역에서 공해 합동군사훈련을 벌이는 등 강력한 무력시위로 대응하고 있다. 남중국해를 자국의 앞바다로 인식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미국을 위시한 주변 국가들의 역내 해양문제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더욱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해양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운용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27) “적극적 방어... 중국 66년 만에 국방전략 수정,” 「중앙일보」, 2015. 5. 27.

IV. 일본의 해양전략

1. 일본의 해양력 변천사

서양의 신식문물이 동양으로 쇄도하던 시기인 18~19세기 일본은 막부가 통치하고 있었다. 막부는 쇄국해방(鎖國海防) 정책을 표방하다가, 1854년 미국의 페리제독이 이끄는 군함들에 의해 문호를 개방하게 된다. 비록 당시 일본이 근대식 군함을 앞세운 서양의 군사력에 굴복하는 치욕을 겪었으나, 당시 일본의 지도자들에게 반드시 근대식 해군력을 갖춰야 한다는 강한 자극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초기 제국 일본 해군을 논할 때 거론되는 몇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인물이 바로 야마모토 곤베이(山本權兵衛)라 할 수 있다.²⁸⁾ 그는 ‘근대 일본 해군의 아버지’라 불리며 해군대신을 세 번이나 역임하면서 제국 일본 해군의 기틀을 다진 인물이다. 또한 야마모토 곤베이가 발굴하여 키운 사토 데스타로(佐藤鐵太郎)를 들 수 있다. 곤베이에 의해서 미국과 영국에서 유학한 사토는 1902년 제국 국방론을 저술하여, 해군이 일본 방어의 핵심전력임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시바 료타로의 소설 ‘언덕위의 구름’으로 알려진 아키야마 사네유키(秋山眞之)를 들 수 있다.²⁹⁾ 그는 러일전쟁 당시 연합함대 사령관 도고제독의 작전참모로 일하면서 함대전술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이들은 모두 당시 저명했던 미국의 해양사상가 마한의 ‘함대결전에 의한 해양통제권의 확보’라는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제국 일본 해군의 함대결전주의 해양전략은 청일전쟁(1894년)과 러일전쟁(1904~1905년)을 통해서 적용되고 신념화 되었다. 1894년 조선의 동학난을 빌미로 청국과 일본이 각각 조선에 군대를 보내면서 청일전쟁이 발생했다. 일본은 인천 앞바다의 풍도해전에서 기선을 잡은 일본 해군은 함대결전을 준비

28) 김태준 역, 에반스·피터 공저, 『日本제국 해군의 발전사(KAIGUN) 상권』(서울: 국방대학교, 2003), p.40.

29) 야마모토 곤베이(1852~1933)는 ‘근대 일본 해군의 아버지’로 불린다. 3회의 해군대신과 2회의 내각총리대신(수상), 외무대신을 역임했다. 사토 데스타로(1866~1942, 중장 예편)는 아키야마와 더불어 일본의 해양사상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아키야마 사네유키(1868~1918, 중장 예편)는 일본 해군 참모의 표상으로, 러일전쟁 시 일본 연합함대 사령관 도고 제독의 작전참모(당시 중령)로 활약했다.

하여 1894년 9월 압록강 연안에서 청국의 북양함대 주력과 결전을 벌여서 승리하게 된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했으나, 러·독·프의 일명 삼국간섭으로 일본은 물러서면서 러시아와의 전쟁을 준비했다. 1904년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러일전쟁이 시작되었다. 제국 일본 해군은 러시아 발트함대가 극동에 오기전에 여순의 극동함대를 격파하고, 이어서 유럽에서 오는 발트함대를 격파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 육군의 도움으로 1905년 1월 여순항의 극동함대를 격멸하게 되고, 이후 5월 7일 쓰시마 근해에서 러시아의 발트함대와의 명운을 건 일대 함대결전을 치르게 되고, 전멸에 가까운 전과를 올린다.

이러한 함대결전 주위에 의한 해양통제권의 확보라는 해양전략이 절정에 이른 것은 태평양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패하기는 하였으나, 1942년의 미드웨이 해전은 일본 함대결전주의 해양전략의 결정판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은 전함과 항공모함 등 함대의 주력함들을 미드웨이 주변해역에 집결하여 미국 태평양함대의 주력을 일거에 섬멸하여 태평양의 해양통제권을 확보한다는 목적하에 해전을 구상하였다. 일본 제국 해군은 미드웨이 해전 이후 지속적인 패배에 따른 전력 감소로 결국 1945년 항복하기에 이르렀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이후 패전국 일본을 좌우한 것은 전후체제와 냉전 구도의 국제질서였는데, 이 시기의 전후체제와 냉전적 구도는 21세기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일본의 전후체제는 점령국 미국의 점령정책에 의한 것으로, 1952년 강화조약 때까지 이어졌다. 이 시기 일본은 패전국으로서 승전국에 의해 지배를 당한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냉전체제로 접어들면서 일본은 전후체제의 연합국과 냉전체제의 미국이라는 큰 그늘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러므로 일본의 안보정책과 그 하위인 해양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안보를 규약한 미일안보 조약의 큰 틀 아래에서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연합국 최고사령부(GHQ: General Head-quarters of th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사령관은 맥아더 장군)로 하여금 패전국 일본을 통치하게 했다.³⁰⁾ 이때 미국을 위시한 연합국의 對日정책은 일본이 미국에 대항할 수 없도록 경제적군사적인 능력을 완전히 해체한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일본 군대를 해산시키고, 전범을 처벌하며, 산업능력을 상실시키

30) 일본의 패전(1945. 8)부터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1952. 4)까지 일본을 점령 통치한 연합국 최고사령부로, 형식적으로는 13개국으로 이루어진 극동위원회가 정책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주도하였다.

기 위한 경제활동에 제한을 가하고, 재벌들을 해체하는 것이었다.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일본에 군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러한 필요에 따라 1952년 4월 26일 일본 해상경비대가 창설되었다. 이후 1954년 7월 1일 ‘방위청 설치법’과 ‘자위대법’이 시행되어 패전 9년 만에 군대를 보유하게 되었다. 다만, 그 명칭만을 ‘해상자위대(MSDF: Maritime Self Defense Force)’로 명명되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전후 일본의 안보는 미일동맹이라는 큰 틀 안에서 전개되었다. 이러한 큰 틀하에서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일본은 경제재건에 주력한다는 일명 ‘요시다 노선’을 추구하게 된다.³¹⁾ 또한 방위정책은 전수방위, 비군사대국화, 비핵 3원칙, 그리고 문민통제라는 4가지 기본 원칙하에 집행되었다.³²⁾ 이것은 전후에 공포된 일본 헌법 9조(일명 평화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기본적인 군사력 건설은 ‘기반적 방위력’달성의 목표를 추구 하였다. 기반적 방위력을 건설한다는 것은 어느 특정한 위협을 염두해 두지 않고, 육·해·공군 전체적으로 균형잡힌 군사력을 달성한다는 것이다.³³⁾

1970년대 소련의 공산주의 팽창 열기 속에서 미국은 소련을 이기기 위한 군사력을 증강하게 되었다. 특히 미국은 동북아에서 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해 일본이 군사력을 더욱 증강해줄 것을 바라는 가운데, 1981년 5월 레이건·스즈키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일본에게 시레인(Sea Lane) 1,000해리를 방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것은 일본을 기준으로 1,000해리까지의 해상교통로를 소련 해군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냉전 시기 일본의 해양전략 목표는 소련 해군이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소련의 잠수함이었다. 극동에 배치된 소련 해군의 잠수함은 일본 해역에서 미국 증원전력을 차단하기 위한 작전을 수행할 것과 일본이 해외에서 들여오는 선단에 대해 해상교통로를 차단 또는 교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냉전기간 동안 일본에

31) 요시다 수상은 일본의 45대(1946.5~1947.5) 및 48~51대(1948.10~1954.12) 내각총리를 역임했으며, 전후 경제우선정책인 ‘요시다 노선’을 제창하였다.

32) 전수방위 원칙(專守防衛: Exclusively Defense-Oriented Policy)이란 오로지 공격을 받을 때만 자위권 차원에서 최소한의 군사력을 사용하여 방위한다는 의미이다. 비군사대국화(Not Becoming a Military Power) 정책은 타국의 안보를 위협할 만한 군사대국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비핵 3원칙(Three Non-Nuclear Principles)은 1967년 에 사토 내각에 의해 선포된 원칙으로, 핵무기의 보유·제조·반입을 금한다는 것으로 표면상 일본의 핵 무장을 금지하는 규범이다. 문민통제(Civilian Control)의 원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으로, 군사에 대한 정치의 우선 또는 군사력에 대한 민주주의적 정치 통제를 의미한다.

33) 배정호, 『일본의 국가전략과 안보전략』(서울: 도서출판 나남, 2006), p.137.

이러한 해양 위협을 가할 국가는 소련뿐이었다.

냉전기 일본 해자대의 전력운용 개념을 살펴보면, 위협의 최우선 순위가 소련 잠수함이었으므로 대잠수함작전(이하 대잠전)이 최우선순위의 해자대 작전이 되었다. 따라서 해자대는 소련 태평양함대의 잠수함에 대항하는 대잠전에 초점을 맞추어 전력을 운용하였다. 두 번째로 대기뢰전이 강조되었다. 일본 본토 및 항구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뢰 위협을 제거해야 했다. 그래서 제국 일본 해군이 패망하고 해체된 이후에도 기뢰전 전력들은 그대로 보존되어 일본 해역 주변의 소해작전에 투입된 것이다.³⁴⁾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중국과 북한이 동북아에서 새로운 위협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먼저 북한은 1993년 3월 NPT 탈퇴를 주장하고, 5월에는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1차 북핵 위기를 조장하였다. 특히 1998년 8월에는 북한이 대포동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상에 떨어졌다. 이로써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 전역을 타격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또한 1990년대부터 중국의 경제성장과 이를 활용한 군사력 증강은 미국과 일본에 대한 확실한 위협이 되었다. 중국은 섬을 연결하는 도련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이를 근간으로 하여 해군력 발전의 단계를 설정하게 된다. 제1도련은 쿠릴 열도, 일본 본토,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보르네오 및 인도네시아에 이르는 선이다. 제2도련은 제1도련 외곽의 선으로 보닌 제도, 마리아나 섬, 괌과 캐롤라인 제도를 연결한 선이다. 이러한 개념에 따라 중국은 해군력 발전 단계를 3단계로 구분하였는데, 1단계는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 2단계는 2000~2020년, 3단계는 2020~2050년이다.

탈냉전기 일본의 안보정책과 해양전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미국의 정책과 전략의 변화이다. 태평양전쟁(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패권 영향과 미·일동맹하에서 미국의 변화에 대한 영향은 일본의 안보정책에 가장 핵심적인 영향요인이다. 미국은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태평양이 있는 아시아로 전략적 축을 이동시켰다. 안보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더욱 주목하고 있다. 중국은 1980년대 초부터 덩샤오핑의 리더십하에서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하여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드디어 2011년에 일본을 제치고 국내총생산 기준으로 세계 2위의 경제규모를 달성했다. 경제 성장에 부응하여 중국은 군사력을 확장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해·공

34) 정호섭, 『해양력과 미·일 안보관계: 미국의 對日 統制手段으로서의 本質』(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1), p.168.

군력 등 첨단 분야에서 급속하게 군사력을 신장하고 있다. 외부적 요인과 더불어 일본 국내적 요인도 또한 고려해야 한다. 2012년 일본은 평화헌법의 개정을 신념으로 두고 있는 아베정권이 들어섰다.³⁵⁾ 경제부흥책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어 대중의 지지를 얻자, 아베 총리는 헌법개헌의 전단계인 해법 해석 변경을 시도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해석이다.

일본 아베 정권의 예상되는 방위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추진될 것이다. 첫째로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미일동맹을 더욱 공고화하여 미일 대 중국의 구도로 만드는 것이다. 둘째로는 미국에 의지하지 않은 독자적인 방위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는 언젠가는 미국의 국력이 쇠퇴하여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이 감소할 때를 대비해 중국에 대해 일본 스스로 대항할 수 있는 방위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일본이 새롭게 제시한 방위정책은 ‘동적 방위력’ 개념이다. 이는 방위력의 존재 자체를 중시한 ‘기반적 방위력’ 구상에 의하지 않고, 방위력의 운용에 초점을 맞추어 각종 군사적 활동을 능동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동적인 것으로 방위력을 정비해 나가겠다는 의미이다. 이에 더하여 아베 정부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주창했는데, 이는 일본은 전쟁을 하지 않는 평화국가로서의 자세를 견지하면서도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자로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미이다. 일본은 냉전기 북방의 소련에 대응하던 전략을 남방의 중국 해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전환했다. 또한 핵 및 미사일을 개발하며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북한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경제 악화로 군사비가 삭감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국인 일본에게 군사적 역할과 활동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편승하여 일본은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으며, 해자대도 도쿄에서 대만해협까지의 기존 1,000해리 해상방위를 넘어 말라카 해협까지의 2,000해리 해상방위를 목표로 그 능력 및 활동영역을 계속 확대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 <그림 1>은 일본의 방위정책과 해양전략 발전 추세를 정리한 것이다.

35) 아베 총리는 2006년 9월 제90대 총리에 취임했으나, 정책 부진으로 2007년 9월 사임했다.

〈그림 1〉 일본의 방위정책과 해양전략 발전 추세



일본은 지난 4월 新미일방위협력지침을 발표했다. 방위협력지침의 기본 방향은 아시아에서 미국을 지원하기 위한 일본의 역할 확대였다. 일본 정부는 의회에서 안보법제가 가결됨에 따라 방위성을 중심으로 후속조치를 강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국 정부(국방부 등)에 후속조치를 위한 협의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0월 20일 서울에서 한일 국방장관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본 회담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행사와 한반도 관련사항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한국의 안보에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주도 면밀하게 협의를 해나아가 할 것이다.³⁶⁾ 그동안 한국의 안보에서 일본의 역할은 그림자와도 같은 역할이었으나, 이제는 일본을 중요한 변수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최근 일본 방위정책 중 해양에 관계된 이슈는 미국과 중국의 남중국해 관련 사항이다.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해양영유권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면서 근해 항행을 강행했다.³⁷⁾ 미국의 항행의 자유에 주장에 대해 일본은 적극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즉, 미국과 일본의 적극 협력하면서 중국의 해양팽창에 공동대응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현재 동북

36) 조세영,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 각론으로 대응해야,” 『중앙일보』, 2015. 9. 21.

37) 미국은 이지스 구축함(라센함)이 남중국해내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 12해리 이내로 항행하였으며 (10.27), 11월 5일에는 카터 미 국방장관이 항모 루스벨트 승함하고 남중국해를 순시 했으며, 1월 12일에는 B-52 폭격기까지 동원하여 남중국해 상공을 비행하며 무력시위를 했다.

아에서 위중하고도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위의 두 가지 사안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미국의 아시아 정책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과 동맹관계에 있는 일본과 관계되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한미동맹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국에게도 밀접하게 관련 된다. 두 번째로는 두 가지 사안의 발생장소가 모두 해양이라는 점이다. 본서에서도 언급했듯이 한국전시 미국에 요청에 따라 일본의 소해부대가 한반도에 인근해역에서 소해작전을 실시한 전례가 있다. 한반도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 차원의 일본 자위대 진입은 먼저 해상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일본 입장에서 해양력 강화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이다.

V. 러시아의 해양전략

1. 러시아의 해양력 변천사

러시아는 가장 넓게 북극해에 접하고 있음과 동시에 태평양, 대서양은 물론 흑해, 발트 해, 베링 해, 오호츠크 해, 바렌츠 해와도 접하고 있는 가장 거대한 ‘해양국가’이다. 그러나 해군력의 건설은 국민의 ‘대륙사상’과 지상군 전력 위주의 고정관념을 타파하지 못한 정치지도자들의 지상군 중심사상에 밀려 군의 중심에 위치하지 못한 채 발전이 지체되었다. 이러한 러시아 해군은 서구 열강의 해상무역로 확보를 위한 해양 개척과 신대륙 발견으로 야기된 식민지 쟁탈전이 있었던 17세기 말에야 비로소 표트르 1세³⁸⁾의 해양을 향한 의지로 인해 발트 해에 강력한 해군을 건설할 수 있었다.

영국을 중심으로 한 해양강국들이 신대륙을 개척하기 위하여 활발히 움직이던 이 당시에 강력한 함대가 없었던 러시아는 결코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었다. 이를 인식한 표트르 대제는 해양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해군을 양성하기 시작하여 1700년에 20척의 전함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해군력을

38) 표트르 1세는 해군력 증대를 위하여 군함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직접 건조하였고, 영국이나 네덜란드로부터 함정을 구입하였다. 그는 해사 전반을 총괄하는 관청으로 1703년에 해군성을 창설하였고, 발트 해와 아조프 해에 함대를, 백해와 카스피 해에 소규모 전대를 배치하였다.

바탕으로 오랜 숙원을 하나씩 해결하기 시작하였다. 포트르 대제는 1700~1721년에 걸친 북방정책³⁹⁾을 통해 스웨덴을 물리치고 처음으로 발트 해로 진출하였으며, 1791년에는 예카테리나 여제가 터키를 굴복시킨 후 크림리아 반도와 흑해를 장악하고 지중해로 진출함으로써 해양으로 진출하고자 했던 제정 러시아의 오랜 숙원을 100년 만에 해결하였다. 이로써 러시아는 명실공히 유럽 해양강국의 일원으로 부상하게 되었고, 해군은 제정 러시아의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나폴레옹전쟁⁴⁰⁾ 시 러시아 함대는 대프랑스 동맹군의 일원으로 참전, 영국 함대와 협력하여 발트 해, 지중해 그리고 흑해에서는 지중해, 터키, 스웨덴 함대와 교전하였다. 1881년 제정 러시아의 콘스탄틴 대공은 해군건설 21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1급 전함 19척, 2급 전함 4척, 각종 순양함 25척을 주력으로 하는 함정 건조계획을 황제로부터 승인받았으며, 이 계획은 이제까지 해군의 주요 목표였던 연안방어 및 통상파괴전으로부터 점차 탈피하여 대양의 제해권을 겨냥한 대양해군 건설을 의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계획에 따라 흑해함대의 재건도 실행에 옮겨져 발트함대와 같이 강력한 함대로 성장하였다.

러시아 해군사에서 1904~1905년의 러일전쟁은 쓰라린 경험으로 남아 있다. 특히 1905년 쓰시마 해협에서 벌어진 이틀만의 해전에서 러시아 함대(발트함대)는 거의 전멸되는 지경에 이르고 항복하게 되었다. 즉, 태평양함대와 발트함대는 거의 전멸하였고, 내해에 갇혀 전쟁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는 흑해함대만 남게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개전 시 러시아 해군은 드레드노트급 전함 4척, 준드레드노크급 전함 2척을 주력으로 하는 소규모 함대만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1917년에 발생한 러시아 혁명의 영향으로 러시아 해군은 사실상 해체되는 정도가 되었다. 혁명을 성공시킨 레닌의 볼셰비키는 정권 장악 후 약 1년이 경과된 1918년 11월에 황폐화된 흑해함대의 일부 함정들을 정비하였는데, 이것이 최초의 소련 해군이다. 스탈린은 소련이 세계 강대국의 역할을 수행하자면 국가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균형 잡힌 해군을 가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1938년부터 시작된 제3차 5개년 해군력 증강계획을 ‘능동적 연안방어 전력 건설’에

39) 러시아는 스웨덴 영토 공략을 위한 사전조치로 1699년에 덴마크 및 폴란드와 동맹을 결성한 다음 1700년에 스웨덴 카를 12세가 미성년인 것을 기회로 3국이 공동으로 스웨덴령을 침공하여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바로 북방전쟁이다.

40) 러시아는 1812년 프랑스 나폴레옹과의 전쟁을 조국전쟁으로 명명하고, 제2차 세계대전 시 독일 군과의 전쟁을 대조국전쟁으로 명명한다.

서 ‘균형함대의 건설계획’으로 변경하여 추진하였다. 스탈린은 해군력 증강계획에 맞추어 함대전력 배비에도 힘을 기울였다. 먼저 1932년 4월 극동에 있던 모든 해상세력을 블라디보스토크에 집결시켜 이를 토대로 1935년 태평양함대를 재창설하였다.⁴¹⁾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당시 소련 해군은 비록 여러 전역에 분산되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강력한 해군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련은 전통적인 지상전 위주의 군사전략에 따라 이러한 해군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독자적인 해군전략을 가질 수 없었다. 이는 결국 해군을 가장 중요한 임무인 적 해상세력 격멸, 해상교통로 보호 및 차단 등에 적절히 투입하지 못하고 주로 지상군 지원 같은 부가적인 임무에만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것은 당시의 소련 지도자들이 독립적인 해군작전 수행보다는 지상군 보완 차원에서 해군을 투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⁴²⁾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련은 군사강국으로 성장하였으나 대양으로 나갈 수 있는 모든 출구가 자본주의 국가들에 의해 봉쇄·포위되어 있다는 압박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으며, 강력한 해군력의 부재로 육상에서 적의 위협을 직접 방어해야 하는 축소된 방어개념의 전략을 탈피할 수 없었다. 스탈린에 이어 최고 지도자가 된 흐루시초프는 해군에 대해 문외한이었고, 새로운 함정 건조가 중단되었고, 1956년에는 스탈린이 계획했던 해군력 증강계획 전체가 중단되어 진행 중이던 많은 함정과 잠수함들 건조마저 중단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흐루시초프의 해군력 감축에 강력히 반대하였던 쿠즈네초프 사령관은 중장으로 강등됨과 아울러 해군 총사령관직도 박탈당하고 말았다. 한편 해임된 쿠즈네초프 사령관 후임으로 해군 총사령관직에 오른 고르시코프는 능력이 절반으로 감축된 해군을 재건해야 했으며, 해양 전력 중 가장 큰 위협으로 등장한 핵폭격기를 탑재한 적 항공모함 세력에 대하여 대형함정을 전혀 갖지 못한 상태에서 본토를 방어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흐루시초프를 실각시킨 후 권력을 장악한 브레즈네프는 소련 전략부대 중

41) 러시아 혁명부터 스탈린 시대 해군의 역사를 시기별로 구분하면 네 시기로 구분된다. 러시아 혁명과 해군의 몰락(1917~1920), 소련함대의 복원(1920~1928), 해군력 증강(1929~1942), 해군력 강화와 발전(1945~1951).

42) 당시 소련은 소함대전략이론에 머물러 있었다. 소함대전략이론은 당시 소련 해군의 이론으로서 반혁명분자 및 적대세력의 상륙에 대비하여 수리가 용이하기 쉬운 무기체계와 장비가 탑재된 함정들로 연안 방어를 수행한다는 이론이다. 소함대전략의 등장은 해군의 군사력 건설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강과 대양함대 및 재래식 전력강화를 중요시하였는데, 그것은 기동함대로서 전 세계 어느 전장에서든지 교전이 가능한 세계적인 군사력을 건설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로써 연안에 머물던 소련 해군은 대양으로 진출하게 되었고, 유도탄 핵무기로 무장한 대양 핵 함대의 발전으로 소련을 해양 강대국으로 부상시켰으며, 해군력을 통하여 국가이익 보호, 해상으로부터의 공격 격퇴 그리고 국가방어력을 전진 배치하게 되었다. 쿠즈네초프에 이어 해군총사령관이 된 고르시코프는 1954년부터 소련해군을 이끌면서 ‘국가의 해양력’ 등 논문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소련해군의 해양전략을 정립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소련해군을 정비하여 대양해군으로 성장시켰다.⁴³⁾ 그러나 1990년 말 경제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구소련 해체시기에 들어서는 소련해군은 전력이 대폭 축소되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소말리아 근해에서 발생하는 러시아 무역항로를 방해하는 해적행위는 러시아에게 주마간산(走馬看山)마냥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 해결해야 하는 비전통적 위협⁴⁴⁾으로 자리잡았다. 카스피 해 유전개발은 카스피 해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안보위협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2010년 아제르바이잔과 투르크메니스탄의 해양경제구역에서 발견된 유전확보 경쟁으로 해상충돌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양국은 해군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⁴⁵⁾ 카스피

43) 고르시코프는 잠수함을 해군의 최우선 무기체계라고 주장하였고, 특히 탄도미사일잠수함을 중요시하였다. 그의 이러한 인식에 따라 1970년대에는 전략원자력잠수함이 해군의 주 세력이 되었으며, 대양에서 적 세력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힘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소련은 계속해서 전략원자력잠수함과 순항미사일잠수함을 개발하였는데, 잠수함은 대함전 및 대지전 능력 뿐만 아니라, 적의 전략원자력잠수함의 탐지 및 파괴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항공기 전력, 수상함 전력, 특수상륙함과 화력지원함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해군전투발전단 편, 『중국...러시아 해군사 연구』(대전: 해군본부, 2002), pp.358-361 참고.

44) 제4세대 전쟁의 이론은 전쟁의 위협을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① 전통적 위협(Tradition Threat)은 통상적인 재래 및 핵전력을 이용한 정규전에 의한 도전, ② 비전통적 위협(Non Tradition Threat)은 비통상적인 무기를 이용한 기습도발, 테러전, 게릴라전, 반란, 전복전, 사상전, 소요사태 등에 의한 도전, ③ 재앙적 위협(Catastrophic Threat)은 대량살상무기 및 첨단정밀무기를 이용하여 국가의 중추신경을 마비시키고 교란시킬 목적으로 주요 목표를 기습적으로 타격하는 미사일전, 소규모 핵배낭, 자살공격전, 특수지역 점령 등에 의한 도전, ④ 파괴적 위협(Destructive Threat)은 최첨단 센서, 첨단정보기술, 사이버기술, 극소형무기, 우주무기, 지향성 무기 등을 이용한 첨단기술전 등에 의한 도전. <http://www.m.cafe.com/anytimeyouwant/24> (검색일: 2015. 10. 10). 본문에서는 전통적 안보위협과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국한해서 러시아의 안보 현실을 분석함.

45) 투르크메니스탄은 1억 3,000만 달러 규모의 수리조선단지를 2011년에 한국기업 ‘현대엔코(現 현대 엔지니어링)’가 최초로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2013년에 완공하였으며, 투르크메니스탄 해군사관학교 공사도 수주하여 곧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도 연안경제를 위해 한국과 해양광산협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주한 아제르바이잔 해군무관이 상주하며 한국 해군과의

해의 유전개발은 러시아의 국익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카스피 해 주변국(러시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이란) 간의 충돌로 발생하는 안보위협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형성된 집단안보조약기구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또한 기후 변화로 북극해의 얼음이 급속도로 녹고 있고, 이로 인해 북극해⁴⁶⁾를 통해 태평양과 대서양을 최단거리로 횡단할 수 있는 새로운 해상 교통로가 개척되면서 발생 가능한 해상테러 위협을 비전통적 안보위협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제 이곳에 러시아 해군은 ‘북극기동전대’를 창설하여 군사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러시아에게 북극해는 이미 전통적 위협과 비전통적 위협이 상존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되었다.

최근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의 지역적·세계적인 위협에 대한 분석은 많았지만, 해양에 대한 영향은 간과되어왔다. 러시아에게 아시아·태평양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여겨진다. 북한의 안보위협은 해양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증대시키며, 러시아의 급격한 전략적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해양지역은 미·중 간 지리전략론적 대결 구도의 중심에 있으며, 아·태 지역의 ‘중견국가’간 해군협력을 포함하는 양자 관계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역내 협력적 메커니즘은 구조적으로 흐트러지고, 경쟁구도는 점차 힘을 얻어가고 있다. 북한의 돌발적인 행동은 이러한 안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와 러시아 쿠릴열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동아시아와 국가들과의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러시아 정부의 동아시아에 대한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한다는 명분을 더욱 확고히 해준다.

2. 21세기 러시아의 해양전략

국가이익을 위한 러시아 고유의 지정학적 개념을 뒷받침하는 국가안보전략은 푸틴이 등극하기 전에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푸틴 정부 1기와 2기를 거쳐 3기에 들어서자 강력한 국가건설을 위한 국가안보전략은 강

교류협력을 위해 노력 중이다. 2015년에는 주 투르크메니스탄과 아제르바이잔 대사관에 최초로 국방무관이 상주하며,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46) 북극해 연안국들은 전투기까지 동원해 영유권 분쟁을 진행 중이라는 내용으로 4,261m 북극 심해에 러시아 잠수정이 국기를 꽂고, 총성 없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며 북극해 영유권 확보를 위해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얼음 녹은 북극 자원 ‘신대륙’을 잡아라,” 『조선일보』, 2010. 12. 10.

력했던 소련시대를 그리워는 러시아인의 지지를 받으며 탄력 있게 구상되었다. 최근 러시아의 안보전략은 2010년에 이은 2014년 채택한 新군사독트린에 잘 드러나 있다. 이 독트린은 NATO 확장과 테러리즘을 주요 안보 위협 요인으로 간주한 것이 특징인데, 기존의 핵 공격뿐만 아니라 국가존립을 위협하는 재래식 무기 공격 시에도 핵무기 사용권한 보유를 명시하는 등 핵무기의 사용범위를 넓히고 외부위협에 대해서는 해외파병을 통한 대응 원칙을 명기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분야를 확대함으로써 러시아의 국가이익이 침해당할 경우 적극적인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MD체계 구축과 최근 시리아 사태를 둘러싸고 미국 및 NATO 국가들과의 대립과 긴장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러·중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중·일 간의 센카쿠 열도 분쟁, 이어도 근해 방공식별구역 확대와 관련하여 야기되는 한·중·일 간의 긴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관망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쿠릴 열도 4개 도서의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의 양보 없이 국가이익을 위해 대통령도 앞장서고 있다. 실제 러시아 대통령 메드베데프는 2010년 11월에 쿠릴 열도의 4개 도서 중 하나인 쿠나시르를 전격방문하고, 이후 2012년 7월 총리가 되고 나서도 다시 쿠나시르를 방문한다. 러시아는 중국과 정례적으로 ‘러시아에 중국의 해’를 정하는 등 상호협력의 국가관계를 유지하는 듯하다. 그러나 국가안보와 관련해서는 협조와 견제의 복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러·중 간 방산협력은 철저히 실리 위주의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인도를 포함한 BRICs 국가, SCO, 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들과도 다각적 협력을 강화 하고 있다.

푸틴은 군현대화를 국방정책의 핵심에 두고 전 모스크바 주지사이자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했던 세르게이 쇼이구를 임명했다. 현재 그는 푸틴의 가장 신망받는 크레믈린의 인물이다. 여러 전문가들은 국방 개혁의 핵심인 국방예산의 투명성을 가장 탁월하게 집행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판단 하에 그를 발탁한 것으로 판단한다. 국가의 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함과 동시에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저비용·고효율화 된 군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했다. 먼저 전력증강에 국방예산을 과감히 투입하여 가시적인 전투력 향상에 주력하였다. 2012년 7월 말 푸틴은 2020년까지 4조 700억 루블(1,600억 달러)을 들여 대륙간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보레이급 8척, 핵잠수함 24척 및 현대식 전투함 5척을 보강할 계획을 발표했다. 그 중 불라바 미사일이 탑재될 보레이(Borei)

급 핵잠수함 4척은 태평양함대에 배치될 것이라는 소식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푸틴의 발표는 국방개혁 2단계(2010~2015년), 3단계(2015~2020년)의 연장선상에 있다. 국방개혁이 끝나는 2020년에는 러시아의 전력 70% 이상이 신무기체제로 현대화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4년 1월 3일 러시아 해군 고위 당국자의 신년 인터뷰에서 러시아 해군은 보레이(Borei)급 핵잠수함과 키로프급 미사일 순양함 등 각 급 함정 총 40척을 빠른 시일 안에 새로 도입해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푸틴 대통령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의지는 국방예산의 증액과 해군력 증강이 보여주듯 꿈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고, 대규모 전력 증강 계획을 통한 군사 활동의 증가는 이제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 2011년 발표된 ‘북극해에 대한 러시아의 기본정책’은 2008년 국가안보 전략서보다 군사적인 면이 더욱 강조되어 있다. 동 정책서는 북극해에서 모든 유형의 활동이 국방과 안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해군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러시아 해군의 해상배치 전략 핵전력이 러시아와 동맹국들에 대한 억제전력으로 최우선시 되었고, 북극해 지역에서 러시아의 국가이익을 위해서는 러시아의 국경과 북극해의 해양경계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러시아의 해양전략은 전 해역에서 전반적으로 수세적인 해양정책에서 공세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태평양, 발트 해, 북해에서는 서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억지전력을 전개하는 등 구체적인 해양력 투자전략을 추진하고, 카스피 해와 북극해에서는 해양 에너지 주도권 확보⁴⁷⁾를 위한 해양정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주변국 간의 협력 또한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가시화되고 있는 북극해 시대를 맞아 북극해 항로 개발과 극동의 부동항 확보를 추진하고, 신속 대응군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는 북극해에 포트르 대체 핵추진 순양함 등 10여 척으로 이루어진 해군 전력을 상주시킨 바 있다. 2020년까지 시베리아-극동 지역 에너지 수송 간선망 확충 등 동북아 지역 석유의 1/3, 천연가스 1/6 공급을 목표로 아·태지역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러시아 태평양함대사령부의 임무와 역할을 확대함은 물론 시베리아 동부를 관할하는 극동군관구사령관에 해군제독 콘스탄틴 시텐코를 임명하여 해양의

47)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심경옥 박사는 ‘러시아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발전추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러시아가 에너지 안보외교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국가전략을 군사안보와 연계시켜 에너지 중심의 해양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자세한 내용은 심경옥, “러시아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발전추이,” 『Strategy 21』, 제21호 봄...여름호(서울: 해양전략문제연구소, 2009), pp.231-232 참고.

역할을 증대시킨 바 있다. 이러한 전략적 인사정책은 동북아에서 미국을 포함한 중·일의 해군력 증강을 견제하고, 쿠릴 열도 등 영유권 분쟁과 북극해 항로의 안보와 자원개발 갈등에 대비한 전략적 차원의 결정으로 해석된다.

최근 佛 미스트랄급 강습상륙함의 러시아로의 도입이 무산되고 러시아의 묵인 하에 이집트로 수출하는 것으로 佛-이집트간 합의되었다. 이로써 러시아 해군은 강습상륙함의 전력 보강에 차질을 가져왔으나, 미스트랄급 상륙함에 장착되는 대부분의 러시아제 무장 및 장비 수출국을 확보하였다는 차원에서 손해보는 계약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러시아의 對이집트 방산수출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추정된다. 최초 러시아는 강습상륙함을 태평양함대에 배치하여 쿠릴열도의 위기사태 및 태평양 해상전력을 보강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첫 번째 미스트랄급 강습상륙함의 함명도 ‘블라디보스토크艦’으로 명명하였다. 이 전력의 태평양함대 배치는 러시아의 동아시아 안보강화에 대비한 전력증강에 힘을 실을 수 있었다. 對러시아 제재로 인해 서방과 방산협력의 영향을 받게 된 러시아는 이제 자국의 함정 건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군력 건설을 모색하고 있다.

세계 해양 안보상황의 변화에 따라 러시아의 해양-해군 전략이 변하고 있듯이 러시아 해양방산수출전략도 국가적 차원으로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올해 7회째를 맞이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된 국제 해군방산전시회(IMDS, '15.7.1~5)는 이제 세계 4대 해양방산전시회를 목표로 러시아 정부의 뒷받침 하 거대 규모로 발전해가고 있다. 올해 부산에서 개최된 국제해양전시회('15.10.20~25)에 러시아 해군사령관 치르코프가 최초로 방한하여 한국의 해양방산 수준을 확인하고, 관심을 크게 보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VI. 맺는 글

미국의 대외정책은 20세기 초반부터 대외정책의 축을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옮기게 되었고, 21세기 현재는 아시아에서 국가적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양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해군 전력을 아시아로 집중시키고 있다. 중국은 1980년대 이후 덩샤오핑 시대부터 해양과 해군력이 제공하는 국가발전과 국가안보, 국가위상의 기회들에 눈을 뜨게 되었으

며, 국가 경제력의 신장과 더불어 외부세계로의 진출을 위해 통로로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21세기에는 국가주도로 해양강국 건설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항모 및 잠수함 등 야심차게 해군력을 건설해 나가고 있다. 일본의 해양력은 냉전시기 소련 해군을 견제하는 충실한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21세기 들어서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의 견실한 파트너로서 해양에서 군사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러시아는 소련 패망이후 해군력도 쇠퇴하였으나, 21세기 들어서면서 경제력을 회복하면서 해군력 증강에 많은 투자를 해오고 있다. 특히, 2000년부터 장기집권중인 푸틴 대통령의 '강한 러시아 재건'이라는 국가 목표하에서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대형함정 및 신형 전략잠수함 등을 확보하면서, 러시아 영토의 동쪽인 극동에 눈을 돌리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동북아 주변 국가들의 해양전략을 정리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갈등과 협력을 위한 움직임이다. 미·중·일·러를 포함한 동북아 주변 국가들의 전략적 움직임을 잘 살펴볼 수 있는 문제는 현재 진행형인 미중간의 남중국해 갈등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무인도에 인공섬을 계속 만들어 자국의 해양주권을 주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하고 싶어한다. 이에 반하여 미국은 중국의 행위가 국제법적으로 부당함을 역설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해양에서의 자유로운 항행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미중은 자국의 입장을 외교를 넘어서 무력시위를 통해서 주장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에 달하고 있으며, 일본과 러시아는 각각 미국과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이 갈등에 동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대국 틈에 낀 주변 약소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적, 안보적 국가이익을 위한 계산을 분주하게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안보상황은 장차 한국에게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고 있다. 미국은 우리에게 안보 동맹국으로서 분명한 지지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반면 중국은 경제적인 협력을 빌미로 우리의 외교 선택지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본은 이 틈바구니에서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이유로 해양활동 범위를 점점 확대시키고 있으며 제주 남방을 포함한 해역을 수시로 항해할 것이다. 또한 러시아는 당장은 중국과의 밀월관계, 그리고 점진적으로는 강대국화의 실현과 동아시아 중시정책에 따라 태평양으로의 관심 증대, 북한의 우발사태 및 쿠릴열도의 영토 영유권 문제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태평양함대의 해군력 현시를 가시화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반도 주변의 안보상황이 급

박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남중국해는 한국의 주요 해상교통로이기 때문에 사활적 이익이 달려 있는 곳이다. 단순히 주변 국가들의 안보 문제에 따라 어느 편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 수립을 해야 한다. 따라서 미중 간 갈등 상황을 면밀하게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장기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과 러시아의 해양활동 움직임에 따른 대응전략을 능동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동진, “中 맞서… 美·日·濠 군사 협력 본격화.” 『세계일보』, 2015. 7. 13.
- 김태준 역, 에반스·피티 공저, 2003. 『日本제국 해군의 발전사(KAIGUN) 상권』, 서울: 국방대학교.
- 배정호, 2006. 『일본의 국가전략과 안보전략』, 서울: 도서출판 나남.
- 심경옥, 2009 “러시아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발전추이.” 『Strategy 21』, 제21호, 서울: 해양전략문제연구소.
- “얼음 녹은 북극 자원 ‘신대륙’을 잡아라.” 『조선일보』, 2010. 12. 10.
- 윤석준 역, 도시 요시하라·제임스 홉스 공저, 2013. 『태평양의 붉은 별: 중국의 부상과 미국 해양전략에 대한 도전』,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 윤정호, “美·日 동맹으로 동쪽 海路 막힌 中, 인공섬 만들어 남쪽으로 우회.” 『조선일보』, 2015. 10. 20.
- 이승현, “美, 항모 투입 움직임… 中군부 “방공구역 선포” 강경론.” 『동아일보』, 2015. 10. 29.
- 임경한·오순근·박남태·정재호·김기주, 2015. 『21세기 동북아 해양전략: 갈등과 협력의 딜레마』, 서울: 북코리아.
- “적극적 방어… 중국 66년 만에 국방전략 수정.” 『중앙일보』, 2015. 5. 27.
- 정철호, 2012. “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 해양전략과 한국의 해양안보: 미중간의 남중국해 해양 통제권 경쟁과 갈등의 영향.” 『세종정책연구』, no. 2012-8.
- 정호섭, 2001. 『海洋力과 미·일 안보관계: 미국의 對日 統制手段으로서의 本質』,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 조세영,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 각론으로 대응해야,” 『중앙일보』, 2015. 9. 21.
- 최재혁, “오바마의 요구에도... 청 남중국해, 새로운 입장 안낼 것.” 『조선일보』, 2015. 10. 26.
- 최종호·임경한 공역, 2013. 제프리 킬 저. 『아시아의 해군력 팽창: 군비경쟁의 서막인가?』, 서울: 해양전략연구소.
- 최원기, 2010. “미국의 환태평양 파트너십(TPP) 추진 전략: 추진 배경 및 향후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no. 2010-24.
- 해군전투발전단 편, 2002. 『중국…러시아 해군사 연구』, 대전: 해군본부.
- Bernard D. Cole, 2014, “The History of the Twenty-First-Century Chinese Navy.” *Naval War College Review*, Summer, Vol. 67, No. 3.
- Mark E. Manyin, et al, “Pivot to the Pacific? The Obama Administration's ‘Rebalancing’ Toward Asia,” CRS Report for Congress, 2012, p.26, <http://fas.org/sgp/crs/natsec/R42448.pdf>(검색일: 2015. 7. 9).

- SIPRI(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Trends in World Military Expenditure, 2012." p.5, <http://books.sipri.org/files/FS/SIPRIES1304.pdf> (검색일: 2015. 7. 9).
- U. S. Department of Defense, "Sustaining U. 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 http://defense.gov/news/Defense_Strategic_Guidance.pdf(검색일: 2015. 5. 3).
- US Navy, US Marine Corps, US Coast Guard. 2015. *A Cooperative Strategy for 21st Century Seapower: Forward, Engaged, Ready*. Washington, D. C.: Department of the Navy.
- World Bank, "Gross Domestic Product 2012." <http://databank.worldbank.org/data/download/GDP.pdf>(검색일: 2015. 6. 4).
- <http://www.m.cafe.com/anytimeyouwant/24>(검색일: 2015. 10. 10).

Abstract

**The 21st Century Maritime Strategies
in the Northeast Asia
- US, China, Japan and Russia -**

Park, Nam-Tae; Jung, Jae-Ho; Oh, Soon-Kun; Lim, Kyung-Han*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vide an understanding on current maritime issues in the Northeast Asia, and thereby help formulating the right strategy for our national security. The article summarizes core arguments in the recently published 『The 21st Century Maritime Strategies in the Northeast Asia: Dilemma between Competition and Cooperation』. It will help readers to comprehend historical backgrounds as well as recent updates related to maritime issues and strategies in the region. Also, readers may find guidance to conceive their own maritime strategies for the Republic of Korea.

Currently, the U.S. is shifting its focus from Atlantic to Pacific, and increasing its naval presence in Asia-Pacific region. Meanwhile, the 21st century China views the maritime interests as the top priority in its national security and prosperity. PLA Navy's offensive maritime strategies and naval building such as aircraft carriers and nuclear submarines are unprecedented. Japan is another naval power in the region. During the Cold War JMSDF faithfully fulfilled the mission of deterring Soviet navy, and now it is doing its job against China. Lastly, Putin has been emphasizing to build the strong Russia since 2000, and putting further efforts to reinforce current naval capabilities of Pacific Fleet.

The keyword in the naval and maritime relations among these powers can

* Commander Namtae Park et al.

be summarized with “competition and cooperation.” The recent security developments in the South China Sea(SCS) clearly represent each state’s strategic motivations and movements. China shows clear and strong intention to nationalize the islands in SCS by building artificial facilities - possibly military purpose. Obviously, the U.S. strongly opposes China by insisting the freedom of navigation(FON) in international waters as recent USS-Lassen’s FON operation indicate. The conflict between China and the U.S. surrounding the SCS seems to be heading towards climax as Russia and Japan are searching for their own national interests within the conflict. Also, the neighboring small and middle powers are calculating their own economic and security interests. This is no exception for us in establishing timely strategies to maximize our own national security. Hopefully, this article leads the readers to the right direction.

Key Word : Competition and Cooperation, South China Sea, Freedom of Navigation(FON), USS *Lassen*